

시론



주 정 민
전남대 대학원장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보편화는 인간의 사고력과 학습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지만, 그 정보의 질과 방향은 인간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AI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인간이 문제를 정의하고 질문을 구성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미래 교육의 핵심은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을 바탕으로 ‘질문할 줄 아는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다.

현재 우리 교육은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여전히 교사가 제시한 정답을 외우고, 시험에서 그 정답을 정확히 재현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한다. 이는 일정 수준의 학습 성취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스스로 탐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경험을 제한한다. 그 결과 학생들은 ‘정답을 맞히는 능력’은 높지만, ‘질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부족한 상태로 대학에

AI 시대, ‘질문하는 교육’과 대학의 역할

진학한다.

대학은 이 한계를 극복해야 할 최후의 교육단계다. 급변하는 지식 환경 속에서 대학의 존재 이유는 더 이상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지식의 재구성과 창출에 있다. AI 시대의 대학은 정보를 단순히 주입하기보다, 학생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고의 틀을 넓혀주어야 한다. 교수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촉매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질문 능력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깊이 있는 질문은 넓은 지식 기반과 논리적 사고, 그리고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결합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질문력은 단순한 언어적 능력이 아니라, 학문적 성찰의 총합적 표현이다. AI가 제시하는 정보의 맥락과 한계를 구별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이러한 질문적 사고로부터 비롯된다.

AI의 작동 방식 또한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AI는 스스로 지식을 창조하지 않는다. 인간이 축적하고 생산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분석해 결과를 산출할 뿐이다. 따라서 AI가 고품질의 지식을 제공하려면, 인간 사회에서 생산되는 지식의 깊이와 정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더 나은 AI를 만들기 위한 조건은 결국 더 나은 인간의 학문 활동이다. 인간이 지식의 창조자이자 AI의 ‘교

사’로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일부에서 AI의 발전이 인간 학습을 대체한다고 오해하는 데 있다. “AI가 다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은 지식의 본질을 기술로 환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AI가 학습하는 모든 자료는 인간이 만든 것이며, 인간의 학문적 활동이 멈추면 AI 또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인간이 학문적 성찰과 질문을 멈추는 순간, AI는 과거의 데이터에 갇혀 진보를 멈추게 된다.

따라서 AI 시대의 대학교육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첫째, 교육과정의 중심을 ‘정답 중심식 학습’에서 ‘문제 중심 탐구’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타인의 관점과 비판 속에서 새로운 해석을 도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을 막론하고 비판적 사고와 표현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 AI 시대 교육혁신의 실질적 출발점이다.

AI가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일수록, 그 정보를 분별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지성이 더욱 중요하다. 대학이 이러한 철학을 중심으로 두고 교육체제를 재구성할 때, 학생들은 AI에 휘둘리지 않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다. 결국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생각하는 인간’, 그리고 ‘질문하는 인간’에게 있다.

기고



박 준 엽
담양군 의원

정치학과 정치심리학, 조사방법론 분야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기억 오류(recall error)’와 ‘자기보고(self-report)’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해왔다.

즉, 일반 유권자의 상당수가 지난 선거에서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제 작동 과정에서 유권자의 선택과 평가가 얼마나 불완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의 문제를 살피는 대변자로서 그 역할이 매우 크지만, 정작 지방의회의 필요성과 지방의원의 가치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이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향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목표나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일상의 작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정치’가 지역 곳곳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상황을 잘 고려할 수 있는 지방자

지방의회 34년, 지방의회의 필요성

치가 가교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즉, 주민들의 작은 불편에서 출발해 정책과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다.

마을 도로 및 농로 정비,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지방의원은 이러한 과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공직자들의 집행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의회의 기능이 약화될수록 행정은 균형을 잃고,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워진다.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일탈사태가 언론에 노출되며 지방의회 전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지방의회 무용론·폐지론’까지 거론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러나 이는 개별적 문제의 확대 재생산일 뿐, 지방의회가 수행해온 본질적 역할과 성과를 간과한 시각이기도 하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는 필수적이다.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혁신을 준비해 나가야 함에도, 현실의 여건은 녹록지 않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초고령화와 인구 급감, 인구소멸지역 지정 등으로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청년들의 지방정치 진출이 어렵다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다. 고통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평소 지역에서의 활동

성과 얼굴을 얼마나 알렸는지 중요해지고, 작은 지역일수록 선거는 혈연·지연·학연 등 전통적 요인에 좌우되기 쉽다. 이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청년들의 도전은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좌절을 경험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는 결국 지역의 지속가능성, 나아가 지방자치의 미래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방 의회와 의원이 시대 변화에 맞춰 혁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청년 후보 육성을 위한 지역 내 공감대 형성, 정당 공천 과정의 투명성 강화, 주민 참여형 의정평가 제도 도입, 의정활동 공개 확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전문가 협력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지역의 미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기반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 주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보자의 능력과 진정성을 직접 확인하고, 연고나 관행을 넘어 진짜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을 선택하는 선거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좋은 유권자가 좋은 지방의회를 만들고, 건강한 지방의회가 지역을 살린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완성되며, 아직은 불완전한 제도적 기반은 지속적인 개선을 거치며 한 단계씩 성장해왔다. 지방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지방자치를 지키는 일은 곧 주민의 일상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주민과 지방의회, 지방의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우리 지역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독자투고

최근 낮과 밤의 일교차로 인해 새벽녘 도로위에 끼어있는 자욱한 안개로 인해 운전애를 먹고 있다.

왜냐하면 심한날은 한치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짙은 안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마치 눈을 감고 운전대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로 여건을 마주한 운전자들 상당수는 비상등을 켜고 감속운전을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조심해서 운전하면 되겠지. 굳이 서행할 필요가 있나’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과속운행을 하는 모습을 볼때면 사고 걱정이 앞선다. 이처럼 짙은 안개는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빛을 분산시키는 특성

때문에 전조등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당연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추돌사고로, 주행속도가 빠른 구간에서는 대형사고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처럼 일교차 큰 만큼,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높아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무조건 감속운전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안개길 추돌사고는 감속없이 무모하게 앞차를 따라가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한속도보다 50% 감속운행 해

야 한다. 또한 전방의 사고상황이나 앞차량 급정거를 대비해 차간거리는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켜 내 차의 위치를 상대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안개는 예고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므로 연무가 짙은 날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대를 잡는 것이 상책이다. 상습적으로 안개가 끼는 지역에서는 서행과 방어운전으로 나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자.

[김덕형·장성경찰서 상서파출소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건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전남 농민이 반토막 벼 경영안정비에 반발하는 사정

전남도와 의회가 내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절반으로 삭감했다. 반토막 난 과정은 이렇다. 도의회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내년부터 60만 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예산을 624억원으로 89억원을 증액하면서 재원 부족을 구실로 228억원에서 114억원으로 칼질한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농민들이 단단히 뿔난 사정이 여기에 있다.

변화된 농경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전남도의 해명이다. 정부의 쌀값 안정 체계 강화, 시·군 재정 부담 가중, 기본소득 도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되레 농업 소득이 10년째 제자리로 지금보다 예산을 2배 늘려도 모자랄 판이라며 원상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사전에 당사자와 협의 절차도 없었다며 불멘소리다.

직불금 성격의 벼 경영안정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근시안적, 일방통행 행정에 분통타는 반면에 전남도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평행선이다. 그런데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리면

서 조정할 이유가 ‘돌려막기’가 아니라면 달리 명확하지 않다. 각종 현금성 지원 증가로 인해 시·군 재정 여력이 바닥이고, 벼의 타 작물과 축산·수산업계도 벼 경영안정비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 요구가 이어져왔다는 설명에도 농민 입장에서 선뜻 동의하지 못한다.

전남도는 내년도 국비로 102억원을 돌파, 신기원을 이뤘다. 경기 둔화와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일궈낸 뜻깊은 결과로, 황금시대의 든든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내놔다. 농수산업의 AI(인공지능) 고부가 산업 전환과 관련해서도 비약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농도(農道)’라 했다. 한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쌀 농사를 포함한 농업 부문에 집중됐던 게 사실이다.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도입 취지도 2ha 미만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두텁게 지원해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일정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가 일상화되며 농업의 변동성이 커졌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면 문제가 됐다. 농민을 우려했다는 비판에 고개 숙여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 관리 광주 5·18사적지 보존·활용 신중한 접근을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하면서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계승하는 ‘빛의 혁명’ 예산도 포함됐다.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 사업이 그것이다. 사적지 지정 28년 만에 처음이다. 5·18 구묘지는 당시 희생자들이 청소차와 수레에 실려 매장된 장소로 진상규명 투쟁의 발원지다. 전두환 정권의 폐쇄 시도에도 지켜냈다. 옛 적십자병원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피를 나누고 부상자를 치료한 생명 나눔의 현장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지다.

의미가 깊다. 주요 사적지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마련된 것이다. 광주의 정체성을 한껏 높일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비가 투입될 옛 적십자병원을 둘러싼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 광주시가 지난달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방안이 큰 공감을 얻지 못한 때문이다. 역사적 공간으로의 보존과 함께 5·18 미래 세대관 조성이라는 목적을 심본 실사야 한다.

먼저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2·3층에 트라우마 치유 실증센터가 입점하는

동시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곳으로 사용된다는 부분이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1층 디지털 역사관에 쓰이는 AR/VR 기술도 어둠 속에서 이뤄지는 체험이 전제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1996년 서남학원이 부지를 사들인 이후 대학병원으로 바뀌었다가 경영난에 2014년 폐쇄됐으며, 2020년 광주시가 매입하기 전까지 방치됐다. 건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대원칙은 원형 보존이라며 일부 구간만 남겨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5·18 사적지의 가치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시민들의 저항으로 무력화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제1호에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선정돼 후속 조치가 주목받고 있다. K-민주주의 산 교육장으로 국내 외에서 재조명되는 만큼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5·18 단체와 전문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표 콘텐츠다. 광주의 위상을 제고할 종합 계획을 짚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대입제도 개선안 제안 내용

10월 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 발표

2028학년도	2033학년도	2040학년도
적용 (25년 기준) 고1 학생	초5 학생	5세
내신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5등급 상대평가 절대평가 병기전로·융합 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 (30년도 고1부터 적용)	정착
수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통합형 수능 과목5지 선다형 문항 중심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병행	절대평가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논술형 평가 도입 확대수능의 대입 영향 축소	안착
전형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수시·정시 분리정시 수능 위주 선발 비율(30~40%) 폐지	수시·정시 통합 (2학기 통합 내신평가 원료 후인 11~12월 대입 전형 실시)	고교 교육과정 중심 대입 체계 정착
대학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울 주요대학) 고교 유형별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 균형 선발 확대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전면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비수도권)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	수능 폐지

 연합뉴스

자료: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바꾸고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10월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2028학년도부터 2033학년도, 2040학년도 등 3단계로 나뉜다. 특히 현 초등학교 5학년에 적용되는 2033학년도 개편안으로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 등을 제안했다.

수능에서 학생의 사고력과 탐구과정,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서·논술형 문학의 비율은 2033학년도 30%에서 2025학년도 40%, 2037학년도 5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이다. 내신의 경우 2030학년도 고1 학생부터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협한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마케팅본부 경영지원부 사업본부 업무국	650-2099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정치부	650-2030	사신부	650-208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CMYK